

지방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배 경 화*

1. R&D를 기반으로 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부각

지식기반경제 시대하에서 경제성장의 원천이 과거 노동, 자본에서 지식, 기술, 브랜드 등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기술과 지식 등의 무형자산을 강조함에 따라 과거 굴뚝산업보다는 R&D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은 주로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보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R&D 기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특성에서 오는 정부개입의 필요성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R&D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에 필요한 금융지원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소재한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과 달리 지방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기술금융이 열악한 상태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기술금융지원정책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정책에 의해 지원되는 기술금융과 별개로 민간의 기술금융지원은 바젤Ⅱ협약이나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은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방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은 수도권 기업보다도 자금이나 핵심기술인력 등에 투자할 자금의 부족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민간주도의 연구개발과 금융시장의 자율화에 따른 민간기술자금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는 정부개입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개입이 최적수준에서 이루어

* 중소기업진흥공단, 행정학박사(e-mail: g9141005@naver.com)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술개발지원 금융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정책의 운영실태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실태 및 문제점

1.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실태

국제적으로, 새로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기업육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에 있어서 과거 값싼 생산요소 투입형 성장전략에 의한 보호 육성 위주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R&D 기반을 통한 자생력 확보 및 경쟁기반 조성 위주의 정책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술금융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산업기술개발융자자금,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자금, 정보화 촉진기금 등이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금융정책은 참여정부에서 2004년과 2005년에 제시된 중소벤처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을 일반 중소기업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과 보증지원의 규모 역시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¹⁾

2007년말 현재 금융권 대출잔액 중 신보, 기보 및 지역신보 등 정책보증으로 공급된 자금규모는 43.6조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의 총액 한도 대출규모(3.5% 저리 공급)는 6.5조원 수준에 이른다. 2007년 연간 정부 정책금융은 정책자금 4.6조원(예산), 정책보증 44.3조원(보증잔액)에 달하고 있다. 이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융자 4.0조원, 보증 44.3조원에 달하고 있다. 정책자금은 중기청·산자부·정통부 등 8개 부처(44개)에서 총 4.6조원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이 중 중산기금(중기청, 산자부)은 정책자금의 67.6%인 3.1조원을 전액 중소기업에게 지원(중소기업 전용지원규모로는 전체 대비 78.4%)하고 있다. 신용보증은 잔액기준으로 신보 28.5조원(64.3%), 기보 11.2조원(25.3%), 지역신보 4.6조원(10.4%)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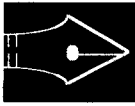
〈표 1〉 2007년 기준 정부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단위: 억원)

구분	중기청(8개)	산자부(16개)	노동부(4개)	정통부(2개)	해수부(4개)	농림부(5개)	문광부(3개)	환경부(2개)	계(44개)
용자	28,308	10,636	1,269	2,115	420	2,263	138	1,150	46,299
중소기업	28,308	6,288	1,269	2,115	420	450	138	950	39,938

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사전조정 예산 기준임.

1) 조영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재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06세입·세출 결산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6.



〈표 2〉 우리나라 주요 기술사업화 용자지원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추이

(단위: 억원)

구분	자금명	사업명	2003	2004	2005	2006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기술개발자금용자	1,600	12,000	1,000	500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응용기술개발지원	2,000	2,500	1,950	1,800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연구개발용자	1,150	1,050	880	53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549	750	1,000	850
		중소벤처창업지원	3,200	2,910	3,900	3,880
계			8,499	8,410	8,730	7,510

자료: 박종복, 「한국 기술사업화의 실태와 발전과제: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8.2., p.36.

또한, 정부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엄청난 R&D보조금을 지원해 왔고, 그 결과로 인해 반도체, SW 등 기초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 이외에도 인력, 마케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기술금융이라 할 수 있다.

신 정부들어 중요 정책으로 등장한 기술금융 정책에 대해 R&D투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우선순위를 보면, 신기술사업화 관련 설비투자 지원(34.5%), 개발자금 지원(31.6%)의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²⁾ 따라서, 기술금융의 역할이 얼마나 요구되는지를 알 수 있다.

2 지방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상 문제점

1) R&D에 대한 기술평가에 기술금융의 역할 미흡

〈표 3〉 중소기업 조달자금의 주요 용도 계획

구분	설비투자	인건비지급	원자재 구입	부채상환	기술개발	계
2001	40.4	8.0	31.6	12.8	7.2	100.0
2002	41.1	9.0	35.0	9.3	5.6	100.0
2003	33.2	16.6	34.1	10.9	5.1	100.0
2004	28.3	15.8	40.7	10.3	4.9	100.0
2005	34.8	14.8	35.3	10.5	4.6	100.0
2006	40.1	14.6	32.4	7.8	5.1	100.0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애로요인조사, 각년도

2) 대한상공회의소,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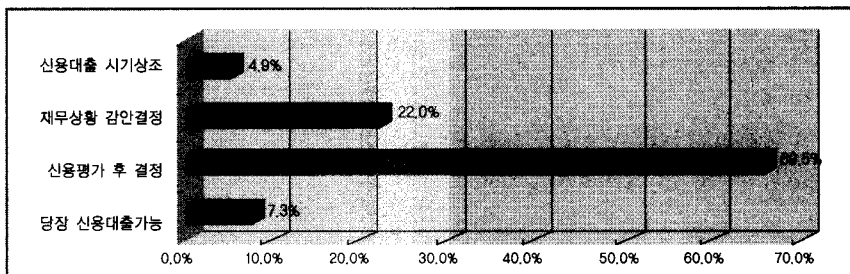
R&D에 대한 기술평가와 금융이 연계된 기술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이라 할 수 있다. 기술평가 보증은 기술평가 주체와 자금공급의 리스크 부담 주체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기술금융의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을 정부재정과 금융기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기술금융시장은 아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은행,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거래소 등이 금융지원과 연계된 기술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지원현장지원을 바탕으로 한 기술평가 노하우를 활용해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산업은행의 기술평가는 주로 자체 자금의 투융자공급에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기술거래소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추천과 시중은행 금융을 연계한 프로그램 및 기술사업화 펀드를 활용한 투자 연계프로그램 등에서 기술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기술금융시스템은 기술평가의 금융연결성이 매우 미흡하여, 기

술평가 결과를 활용한 자금공급에서 수반되는 리스크를 서로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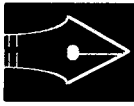
또한, 중앙정부는 기술평가 표준모델 개발, 평가기관의 전문성 제고, 기술평가 정보의 유통 활성화 등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지방의 민간금융기관의 대출로 연계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충북지역의 민간금융기관들은 오랜 여신관행과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기술평가서를 심사자료의 하나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이다. 기술보증기금이 금융기관의 여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는 이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실제 금융기관들은 기술평가인증서에 의한 신용대출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해 65.9%가 자체 내규에 의해 신용평가 후 결정, 22.0%가 재무상황을 감안 후 결정하겠다고 답한 반면, 당장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7.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림 1] 기술평가인증서에 의한 신용대출 여부



자료: (재)시장경제연구원 「기술평가보증의 중소기업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기술신용보증기금, 2007.11.
주: 2006년 12월 실시한 설문조사로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의 4개 영업점에서 응답하였음.

3) 조영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시급", 「e-Kiet」, 산업연구원, 2006.7.4.



2) 이차보전방식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상 한계

정부는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체제로 1994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지방중소기업육성법」이라 함)을 제정한 바 있다. 동법 제정을 계기로 그 동안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던 지방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차원에서 해당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그 대표적 예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들 수 있다.

기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 직접융자방식과 이차보전방식으로 나뉘었다. 직접융자방식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대구, 제주, 광주 등의 지역에 추진하는 방식이고, 이차보전방식이란 지원자금 신청액을 은행 자체자금으로 지원하고, 은행금리와 지원금리 간의 이차차이만을 조성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방식으로 인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효율성이 기타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보다 효율성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낮아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정책효과성이 기타정책자금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다만, 일부 지자체는 기금을 조성하여 지

역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는 있으나, 아직 그 지원실적 및 지원효과와는 미흡한 실정이다.

3) 지역금융기반의 중소기업 금융 리스크 부담 외면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지원은 지방중소기업의 특성과 은행속성상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⁵⁾ 우선, IMF 외환 위기 이후 전국적으로 금융과 실물 경제와의 관련성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금융 산업이 단기적 영업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금융기관의 개별적 효율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 산업 고유의 금융중개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둘째, 국가 주도, 중앙 집중형 경제운용 방식은 수도권 경제 집중과 지방 경제 침체라는 극심한 양극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즉, 지역에서 환원금융이 실현되지 않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내발적 성장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셋째, 지역 금융시스템은 금융세계화의 위협성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중소기업이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4) 신동진, "성과지표측정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사업평가",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3호」, 국회예산정책처, 2005.4.

5) 김영철·강승규, "지역금융시스템의 구축: 지방은행과 중소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2003.7.



III. 지방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1. 지방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책금융의 방향

지방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은 융자지원방식에서 주로 다루는 기업들 대부분이 창업자금을 제외하고는 업력 초기의 기업들보다는 일정 기간이 지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지원양상은 주요 선진국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향후 기술정책금융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창업초창기의 리스크는 민간 R&D 투자금융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이 시기 이후의 지방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금융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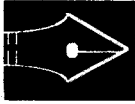
따라서, 지방의 R&D 기반 혁신형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은 크게 다음 5가지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산업 중심 지원체제의 수립이다. 이미 참여정부에서는 지역마다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신정부에서도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토대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융자 금융지원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유사한 지역특화산업지원 관련법을 제정하여, 지역금융이 지역산업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소기업정책금이 지역산업의 R&D 기반 혁신형

기술정책금융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지원프로세스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중소기업이 R&D를 기반으로 한 혁신형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원기관의 역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재정이 열악하고,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안된다. 경기도나 강원도 등에서는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여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나, 그 운영 재원이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지자체와 중앙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프로젝트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구조기금과 같이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자국의 낙후지역개발이나 구조조정을 위해 유럽 구조기금에 별도의 소규모 기금을 신청하여 운영한다든지 하는 지방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최근에는 논의되는 산업은행 매각을 통한 신설 기관 설립보다는 기존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독일과 같은 Hausbank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전술한 지방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책금융 운영방향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6) 하준경, 「연구개발 투자의 촉진을 위한 금융시스템」, 한국금융연구원, 2007.12.



1)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사업화 금융 지원 강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산업 클러스터나 일부 대도시권이나 수도권 등의 단지에 입주한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전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산업 생산으로 연결하는데 필요한 자금공급체계가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전략산업과 금융의 연결을 위해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는 단순한 자금공급관계를 넘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네트워킹관계로 형성되어야 한다. 즉, R&D, 제품개발, 상품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조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업종별, 규모별 특색을 반영하여 융자방식보다는 민간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다양한 방식의 투자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평가 및 기술창업금융의 비중을 높여 지역의 R&D 기술성 위주의 정책자금 지원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실례로서, 기업은행이 강릉

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강릉시 클러스터 론, 산업은행의 원주 의료기기 지원펀드(3,000억원 조성), 신용보증기금의 지역특화산업보증제도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2) 지역금융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 재투자 기반 조성

지역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의 자금이 지역금융기관을 통해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의 재원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자금의 선순환체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재원마련에 있어서 과거처럼 지역의 자금이 역외유출되는 것을 막고 특히, 수도권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는 민간금융기관의 투자재원을 지방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제도로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들 수 있다. 지역재투자법은 1977년에 제정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대출 취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

〈표 4〉 각국 정부의 혁신기업 투자프로그램

국 가	프로그램(설립년도)	투자대상	주요성과
미 국	Small Business Investment Center (1958)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기업	'02년 초기단계 1,800개 투자
유럽연합	European Investment Fund (1994)	기술초기단계 기업	'94~'04년간 27.7억유로 투자 (초기기업 68%)
이스라엘	Yozma Fund (1993)	초기단계 벤처기업	초기 4년간 100개 기업투자 20개 IPO
네덜란드	Twinning Fund (1999)	정보통신분야 창업기업	

고, 금융기관들이 지역사회에 대출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재투자법의 신설을 통해서 지역 민간금융기관들의 지역밀착 경영을 강화하고, 지역 특수성에 맞춘 금융서비스의 전문화 및 차별화 전략 추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재투자법이 그 취지를 살려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혁신 주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⁷⁾

3) R&D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지방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기 위하여 R&D투자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조세감면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처럼 기업의 R&D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R&D세액공제 영구화, 협동 R&D에 단일 세액공제 실시, 대체최저조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⁸⁾하에서 세금을 면제시키는 등의 기업 R&D지원방안을 지방의 R&D 기반 혁신형중소기업에게도 확대·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⁹⁾ 또한, R&D 개발에 있어 지적재산권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에게 이전할 때 산업재산권의 폭넓은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여 기업의 상업화 유

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Bayh-Dole법의 제정과 같이 우리나라 정부지원의 연구성과의 상업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기술의 자산화 및 유동화 촉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처별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술이전기반 구축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술거래기관, 기술이전전담조직 등 기술거래시장의 행위자를 형성하고, 기술이전시장개설 등 관련 기반 구축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술이전 전담조직은 대폭 확대된 반면 지원규모는 작아 실질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지경부), 지역기술이전센터(지경부), 사립대학기술이전조직지원(중방청), 국공립대기술이전플랫폼(지경부)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¹⁰⁾ 이러한 기술이전을 통한 자산화 및 유동화는 기존에 매출채권 및 부동산 등 유형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에서 기술자산을 담보로 하여 IT중소기업 자금애로를 해소해 줄 필

7) 배경화, 「부산지역 여성기술혁신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지방정부 출자 벤처캐피탈 운영을 중심으로」, 부산발전연구원, 2005.
8) 기업의 연구 장비 도입에 비용처리를 허용하고, 기업 대체최저조세제도로 감세 혜택을 주기 위한 미국의 제도로서 적격 분야의 종업원과 관리자의 임금과 급여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확대, 과학기기와 같은 장비를 도입하거나 건물을 설립한 경우에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용처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9) 중소기업연구원, 「미국 기업의 R&D활성화 정책방안」, 「주간브리핑」, 2007.5.7.,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미국의 R&D 활성화를 위해 2007년 4월 발표한 「혁신, 경쟁력 및 변형 촉진을 위한 R&D세액공제 확대」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이다.
10) 미국은 연간 2천만불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출연연구소의 경우 예산의 0.5% 이상을 기술이전에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1980)



요가 있다.

IV. 맺음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업 경쟁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기술경쟁력을 들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과 직결되며, 그 핵심에는 지방중소기업의 R&D 기반 기술경쟁력이 어느 정도이냐가 관건이다. 이처럼,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기술금융정책에 대해 지역현실을 고려할 때 신 개념의 기술금융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존 지원체제를 재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 R&D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금융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김영철 · 강승구, “지역금융시스템의 구축: 지방은행과 중소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2003.7.
- 김효명,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연구」제26권 3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5.4.5.
- 박광배,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현안과제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06.12.31.
- 박종복, 「한국 기술사업화의 실태와 발전과제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8.2.
- 배경화의 2,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 효율화방안」, 강원도, 2007.1.
- 배경화, 「부산지역 여성기술혁신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지방정부 출자 벤처캐피탈 운영을 중심으로」, 부산발전연구원, 2005.
- “정책금융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금융안정연구」, 예금보험공사, 2005.12.
- 신태영외 7인, 「기술혁신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6.
- 오상훈 · 이창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전략」, 중소기업연구원 · 중소기업청, 2006.5.25.
- 조영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시급”, 「e-Kiet」, 산업연구원, 2006.7.4.
- 조영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재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06세입 · 세출 결산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6.
- 조용현, 「중소기업 R&D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6.
- 충청북도 통계연보.
- 하준경, 「연구개발 투자의 촉진을 위한 금융시스템」, 한국금융연구원, 2007.12.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과학기술부, 2007.8.
- <http://db.kosbi.re.kr/>
- <http://www.kgin.or.kr>
- NVCA,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Yearbook 2004, 2004.5.